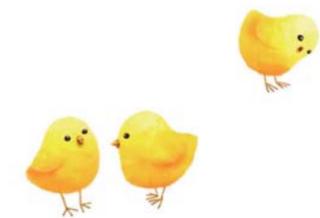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

국민 권익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5
VOL.43

03
0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6자리 → 5자리

1 1 0 - 1 1 0 → 0 3 1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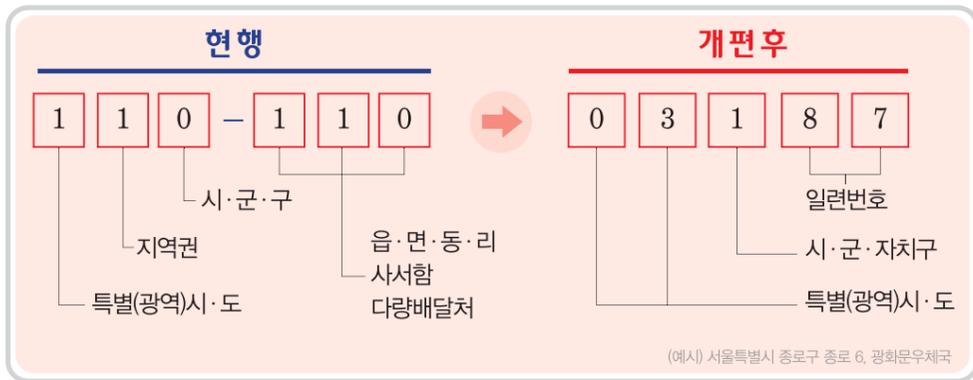


● 우편번호가 바뀌는 이유는?

도로명주소 시행(14.1.1.)과 더불어 국가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되어 국가기초구역에 부여된 5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합니다.

● 새 우편번호로 바뀌는 내용은?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을 의미하며,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집배원의 배달경로 최적화로 우편물이 신속 정확하게 배달되어 우편서비스가 개선되며, 모든 공공기관이 동일한 구역번호의 사용으로 위치찾기가 쉬워져, 국민편익이 증진됩니다.

● 새 우편번호는 어디서 쉽게 검색할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우정사업본부(www.koreapost.kr) 및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CONTENTS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5 03+04 vol.43



발행일 2015년 4월 17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임윤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Special Theme

- 04 스페셜 1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 척결
- 08 스페셜 2 기관 간 협업으로 '투명사회 추진동력' 끌어올린다
- 10 스페셜 3 대한민국 반부패 모델, 세계에 알리다
- 12 연중기획 권익위와 함께 간다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지원한 '9살 유섭이'의 사연



소통 공감

- 14 국민권의 리포트 공공기관 청렴도 체계적으로 쌓아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
- 18 권익위가 간다 기업하기 좋은, 청렴한 선진 사회 구축을 위해
- 22 이슈 포커스_스케치 깨끗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
- 26 이슈 포커스_인터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 일선에서 출선수범하다
- 28 국민권의 Q&A 국민권을 지키는 365일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 30 핫민원 키워드 민원 떠넘기기는 이제 옛말, 팽팽민원 조정 제도로 빠르게 해결!
- 32 국민이 행복한 세상 관공서 사칭 스미싱 금융 사기,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새로운 시작, 봄맞이 디톡스하세요!
- 42 문화 레시피 문화가 생동하는 봄, 봄, 봄...
- 44 똑똑! 생활법률 교통사고 합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 처리 과정이 궁금해요!
- 46 꼭 알아두세요!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가족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 48 ACRC News
- 50 독자 옴부즈만

클. 윤진아가자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 척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올 봄 대한민국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떠들썩했다. 권익위에서 발표한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 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 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임직원으로 확대됐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수수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가성 증명이 어렵던 식사 대접, 골프 대접, 휴가비 등 후원 명목의 접대도 해당 대상이 된다. 다만 관혼상제에 부조하는 행위는 한국 사회에서 관행이란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으로 친분을 맺는 사람이 절필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년 8개월 간의 기나긴 법안 통과 과정

참으로 다사다난한 법안 통과 과정을 거쳤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수차례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 대해, 대가성 접대임을 입증하지 못한 채 징계로 그친 데 대해, 권익위가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 시초였다.

권익위는 2011년 6월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금품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했던 공직자도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들어 있는 것이다. 2012년 8월 권익위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해 입법을 예고했지만,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1년이 더 걸렸다. 결국 2013년 7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한다'는 정부 조정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3주 만에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7일 공포 절차를 마쳤다.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내년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 척결'이란 전 국민의 염원에 한층 가까이 설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국회에 제출됐고, 같은 해 12월 정부위원회에 법안으로 상정됐다. 오랜 시간 표류해왔던 이 법률은 올 1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수정돼, 마침내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커다란 전환점

발의부터 공포까지 긴 여정을 겪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 사회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남은 숙제도 많다. 언론사와 사학재단 등 민간인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언론 자유나 평등권 침해라는 우려가 나왔고, 배우자가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면서 '연좌제' 등 위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익위는 오는 5월경 첫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간 논란이 제기됐던 사항과 여론 개선 방안, 보완책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8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법이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란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반영해 태어난 법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적용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청렴한 공직문화 및 투명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정청탁 금지법

영재선배님! 나왔일에 고생 많으십니다. 몸보신 좀 하시라고 삼백 넣었습니다.

저왕 선배님 직무는 관련도 없고,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없으니까 받으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수락이! 공직자는 이런 돈 받으면 안된다. 니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고맙다.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알려라. 내 워튼지 도와줄게.

예휴... 공직자분이 이러시면 이제는 큰일나죠

최근 반발하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9.4%

그동안 공직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이거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거나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3일, 국회에서 국민 우려분야 중 하나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부정청탁 금지법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반듯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Q. ‘국회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고충민원을 듣고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 한해서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국회의원에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제3자의 인사 청탁, 인·허가 청탁 등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 받게 됩니다.

Q. 본인이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직접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정당한 청탁을 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마련된 대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

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고자도 책임성을 갖게 하고, 허위 신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밖에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무고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Q.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데, 개인의 명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정청탁의 내용,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개 시기·공개 범위·방법 등의 절차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1만 원이면 형사 처벌, 99만 원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기준이 정당한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한번에 받은 금품 등의 액수에 대



대해 알아보는 Q & A

해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제재 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 처벌 대상의 합리적 기준으로 100만 원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100만 원 초과 금품 제공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등 다른 입법례도 충분히 고려한 결과입니다.

Q. 공직자 등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무조건 전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품 등의 종류를 8가지로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도 친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혹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고·의례·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 등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상한 액수를 얼마로 정할지는 앞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입니다.

Q.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회상규란 기준이 너무 어렵고 추상적이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과정에서 불명

확성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형법」 제20조에서도 정당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마다 행위의 동기나 수단 등 구체적인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세부 매뉴얼을 통해 ‘사회상규’를 포함한 금품 수수가 허용되는 사유에 관해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권익위는 법률 시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현재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을 구성해 시행령 제정과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5월 중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의견 조화를 거쳐 8월경에 입법 예고를 하는 등 가급적 연내에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과는 별도로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고자 교육·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1300여 공공기관에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지침 전달

기관 간 협업으로 '투명사회 추진동력' 끌어올린다

2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지침 전달 회의' 개최

권익위는 2월 11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2015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지침'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권익위가 올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등 1,300여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새 정부 출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된 반부패 정책을 발전시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올해는 ▲ 고위 공직자 청렴 서약 및 직무 관련 강의로 안 받기 운동 전개 ▲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화 ▲ (가칭) 장관행동강령 제정 추진 등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공직자 의식 개혁 등 청렴 문화 확산 중점 추진

권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직자 의식 개혁, 부패 취약 분야 법·제도 개선, 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과 세부 지침을 설명하고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권익위가 1,300여 공공기관 감사관에 전달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직사회 전체에 '청렴'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무직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강의로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가칭)장관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최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게 할 방침이다. 또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모든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안도 추진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진단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확한 부패정보 공유야말로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 수립의 전제조건인 만큼, 부패정보 수집 과정에서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 취약 분야인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청렴도에 반영함으로써 청렴도 측정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패 취약 분야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폐쇄적 조직 운영으로 부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는 집중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점에 발굴, 제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렴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을 실시해 기관 맞춤형 개선책을 제시하고, 부패영향 평가나 행동강령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재정 누수 행위에 대한 신고도 더욱 활성화한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 및 공익 신고자 보호 지침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1월부터는 본격 운영 중인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비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를 일원화하고, 정부 예산의 허위·부정 청구를 종합적으로 감시해 환수할 수 있도록 <공공 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와 함께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길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이날 위와 같은 내용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지침을 전달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연고·온정주의에 사로잡힌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힘주어 말하고 "공직 부패 척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각급 기관에서는 사소한 부패부터 하나씩 근절한다는 생각으로 청렴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원칙을 지켜야 공공기관도, 대한민국도 올곧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처럼 권익위는 '투명사회 구축'에 두 소매를 걷어붙인 참이다.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으니, 이제 온 국민까지 함께 나서 속도를 높여 나갈 차례다.



글: 윤진아 기자

사진: 편집실

국제 반부패 포럼 개막 연설

대한민국 반부패 모델, 세계에 알리다

국제 사회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OECD 반부패 포럼'에 참석, 개막 연설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청렴 정책 전반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피력해

국제 사회의 반부패법에 비할 때, 부정청탁금지법의 범위와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의 경우, 연방법과 50개의 주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부패 규정도 연방 형법에만 적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형법은 뇌물이나 부정청탁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법 중 하나이고, 이외에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를 다루는 모든 연방법과 50개 주법은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방대하다. 부패를 엄단하려는 미국의 정치문화에 따라, 연방 형법의 단속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총동원해, 공정한 사회를 도모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네 부분에서 현존하는 반부패법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경우, 직무 관련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즉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선물 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금품 제공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 사회에서 주목한 부정청탁금지법

이성보 위원장이 3월 2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반부패 포럼' 개막 연설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개막연설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반증이다.

반부패 운동 단체인 국제 투명성 기구(TI)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75개국 가운데 43위, 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하위권인 27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이 OECD 국가의 평균에 이를 경우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65%포인트 상승한다고 한다. 반부패·청렴 문화가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이성보 위원장은 "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이 근절돼 공직 사회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와 세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방문으로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고 OECD 선진국들과 함께 반부패 정책 교류를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범위가 사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재단 이사, 언론인까지 확장됐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도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셋째 금품 제공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넷째로 법인의 고용인이 법인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지급하거나 불법 청탁을 한 경우, 법인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제 사회 차원에서 반부패 협력 확대

한편 이성보 위원장은 3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현지 우리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 시스템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권익위는 부패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과 손실, 예방 대책 등을 현지 한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했다. 반부패 세미나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간 권익위와 영국 정부가 협

력해 추진해온 한-영 반부패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제1차 세미나는 지난해 12월 9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내각사무처의 프랜시스 모드 장관 및 중대비리조사청(SFO)의 데이비드 그린 청장도 만나 '부정청탁금지법'과 현재 권익위가 입법 추진 중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등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을 설명하고, 한-영 간 반부패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권익위는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장관행동강령' 제정과 관련해서도 영국 정부가 앞서 1992년부터 시행해온 장관행동강령(Ministerial Code)의 이행 경험을 공유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는 반부패, 공정, 투명 사회로 요약된다.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성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쉴 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관심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진화도 점점 앞당겨질지 기대한다.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이동신문고 현장에서 지원한 '9살 유섭이'의 사연

권익위는 방방곡곡을 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움이 필요했던 많은 분들의 힘든 사연을 이동신문고와 함께 치유해드리며,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드릴 수 있어 저희도 매번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작은 손길이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 깊은 행복을 전할 수 있길 바라며, 국민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공감하고자 더욱더 애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호 <국민권익>에서도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더욱이 얼마 전 이동신문고 앞으로 감동 어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올해 처음 충남지역으로 나갔던 이동신문고에서 전유섭 어린이가 가족들을 만나, 의료비를 후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망의 씨앗'을 얻은 전유섭 어린이의 부모님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유섭이가 하루 속히 두 발로 건강하게 걸길 바라며, 이동신문고의 머나먼 여정에 아낌없는 애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동신문고가 전유섭 어린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했듯, 권익위와 함께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싶으시다면,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으신 후 <국민권익> 편집실로 엽서 한 장을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를 모아, 이 숫자만큼 모금액을 적립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번 이동신문고에서 만나게 될 이웃들을 위한 지원금에 일정액을 보태드릴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독자들의 따사로운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권익과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어제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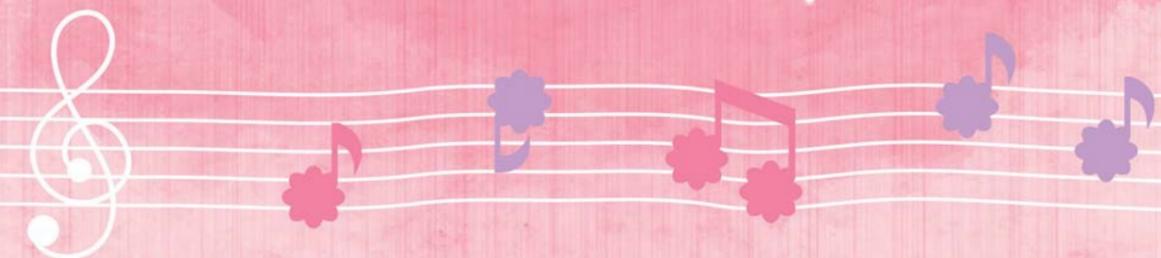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 전유섭 어린이의 엄마와 아빠입니다. 유섭이는 태어날 때 의사사가 있었습니다. 제때 산도를 빠져 나오지 못한 탓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몸이 새까맣게 되면서 뇌의 손상까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유섭이가 배밀이 하는 정도로 움직이는 게 최선이라고 했지만, 현재 네 발로 기기, 양반다리 하고 앉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내 여러 병원에서는 유섭이가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어린이병원 한국계 박태성 박사님으로부터 유섭이가 SDR 수술을 받으면, 워커를 잡고 걸다가 차차 걸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인 결과를 들었습니다. 수술은 1차 신청 후 거절되었다가 3년에 걸친 재활운동과 교정 치료를 마친 다음 2차 신청을 했는데, 그때서야 유섭이의 수술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수술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국이라 2번의 걸친 수술비는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간 많은 치료비를 써온 탓에 수술비가 턱없이 부족해, 개인 대출과 여러 후원 단체를 알아본 것은 물론 집안의 물건까지 팔아치우며 전력을 다해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당지시청에서 사회복지과 선생님께서 이동신문고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감사하게도 센터장님으로부터 도움의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앞으로 저희가 받은 사랑,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동신문고 담당자 분 이하국민권익위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ACRC



소통 공감

- 14 **국민권익 리포트** 공공기관 청렴도 체계적으로 쌓아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
- 18 **권익위가 간다** 기업하기 좋은, 청렴한 선진 사회 구축을 위해
- 22 **이슈 포커스_스케치** 깨끗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
- 26 **이슈 포커스_인터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다
- 28 **국민권익 Q&A** 국민권익을 지키는 365일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 30 **찾민원 키워드** 민원 떠넘기기는 이제 옛말, 핑퐁민원 조정 제도로 빠르게 해결!
- 32 **국민이 행복한 세상** 관공서 사칭 스미싱 금융 사기,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공공기관 청렴도 체계적으로 쌓아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 시책 평가 워크숍

3월 18일~19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2015년도 청렴도 · 시책 평가 워크숍'이 진행됐다. 2015년도 권익위 부패방지 사업과 청렴도 · 시책 평가 방향을 소개하고, 각 공공기관 청렴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는 중앙행정 기관, 광역자치 단체, 기초자치 단체, 시 · 도교육청, 국 · 공립대학 및 대학병원, 공직 유관 단체 등 268개 공공기관 청렴 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부패지수를 낮추고 청렴도를 끌어올릴 최적의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A to Z

권익위는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의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 자료를 기초로 청렴수준 및 부패 요인을 진단,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측정 대상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또는 공직자에 대한 외부 청렴도, 각 기관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 청렴도, 전문가 · 업무 관계자 · 지역주민 등 정책 고객의 평가로 이뤄지며, 설문, 전화, 온라인(스마트폰, e-mail)을 통해 조사한다. 부패 사건 발생 현황과 부패 행위자의 직위 등을 점수화해 외부/내부 청렴도에 각각 감점 처리하고, 호의적 평가 유도 건수와 표본 오염 행위도 점수화해 종합 청렴도 점수에 감점 반영하는 방식이다.

2002년~2007년 초창기 측정 모형은 대민 · 대기관 청렴도(외부 청렴도)에 한정됐다. 2008년부터는 측정 모형을 개편,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를 합산한 평가가 진행됐다. 부패지수와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를 평가하던 '외부 청렴도'에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예산/업무지시)를 측정한 기존 '내부 청렴도' 외에 항목을 추가했다.

2010년 측정 대상 기관 수(711개)가 전년(478개)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2011년부터는 부패 사건 발생 현황 감점이 일부 도입됐으며, 정책고객평가도 시범 도입됐다. 2012년에 이르러 측정 모형은 한층 세밀해졌다. 종전의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는 물론 정책고객평가(부패인식/통제/경험지수) 및 부패 사건 발생 현황과 신뢰도 저해 행위에 따른 감점까지 평가에 반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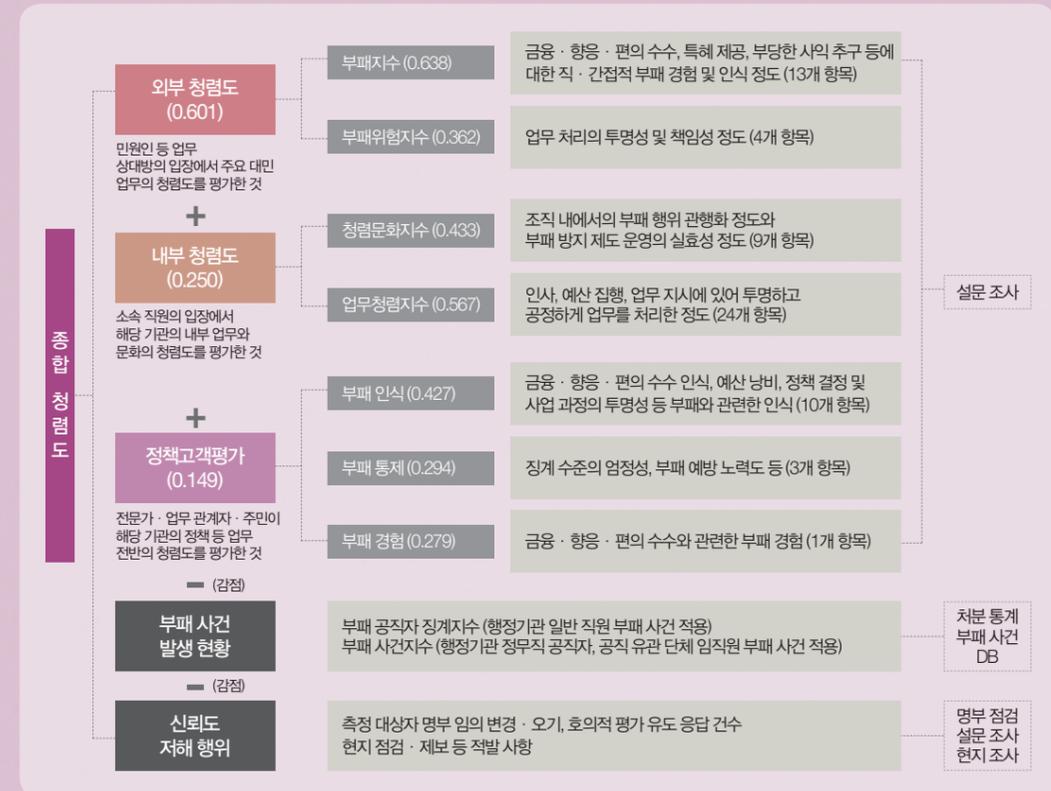
권익위는 기관별 청렴도 측정 결과를 청렴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와 함께 대외적으로 공표하는데, 측정 대상 기관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을 유도할 입체적 · 종합적 분석 결과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렴도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시행해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독려하고,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지속 확인한다.



▶ 청렴도 측정 연혁

연도	측정 모형	대상 기관
2002년		71개
2003년		77개
2004년	• 대민 · 대기관 청렴도(외부 청렴도) : 체감 청렴도 + 잠재 청렴도	313개
2005년	- 체감 청렴도 : 부패 경험(제공 빈도와 규모) 및 인식	325개
2006년	- 잠재 청렴도 : 업무 환경, 행정 제도, 부패 통제	304개
2007년		333개
연도	모형 개편	대상 기관
2008년	• 종합 청렴도 : 외부 청렴도 + 내부 청렴도	381개
2009년	- 외부 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478개
2010년	- 내부 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 · 예산 · 업무 지시)	711개
2011년	• 부패 사건 발생 현황 감점 일부 도입 •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연도	모형 개편	대상 기관
2012년	• 종합 청렴도 : 외부 청렴도 + 내부 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662개
2013년	- 외부 청렴도 :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699개
2014년	- 내부 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인사 · 예산 업무 지시) -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지수, 부패통제지수, 부패경험지수 - 감점 : 부패사건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 행위	721개

▶ 종합 청렴도 측정 모형 (2014)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방향

올해는 전년도(721개)보다 38개 기관 증가한 총 759개 기관이 청렴도 측정 대상이 된다. 우선, 광역의회 및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 등 총 62개 지방의회가 청렴도 측정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다. 시·도 권역별로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의회(2개)가 측정 대상이 된다.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해 측정하되, 2013년도 미측정 교육지원청은 금년도 측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조정됐다. 또한 내부 청렴도 타당도 제고를 위해 공직 유관 단체 5개 유형 중 최소 규모인 정원 50명 이상 기관만 측정 대상에 포함했다. 연구원은 기존 대상 중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예산 일정 규모(1,000억원) 이상 기관일 경우 측정 대상이 된다. 지방공사·공단은 시·도 및 일부 기초지자체 산하 공사·공단을 측정하되, 규모 등 기관 특성을 반영한 분류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은 4년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평가부문	주요 평가내용	배점(100%)	
반부패 의지 노력 (9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자체 감사 활성화 등: 4개 단위과제	13.5
	• 정책투명성·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시민감사관 등: 3개 단위과제	13.5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제도개선 과제 이행, 자율시책 추진 등: 4개 단위과제	27.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 청렴교육 활성화 등: 3개 단위과제	20.25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행동강령 위반 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등: 3개 단위과제	15.75
부패방지 성과 (10%)	• 청렴도 개선	청렴도 개선 정도: 1개 단위과제	3.0
	• 부패공직자 발생	부패 사건 발생 정도: 1개 단위과제	7.0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감점)	반부패 시책 추진 협조: 1개 단위과제	총점의 10% 이내	

부패 취약 분야 진단이 강화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최근의 부패 사건 발생 현황 등을 참조해, 올해 평가에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부패 취약 분야를 신규로 발굴했다. 청렴도 측정 체계도 한층 정교해진다.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에 대한 전면 검토를 통해 측정 지표를 보완하고, 부패 사건 감점 사전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징계 자료, 언론 보도, 감사 자료 등을 전방위로 활용해 부패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부패 공직자 징계지수도 보완된다. 행정기관 공직자의 부패 행위로 인한 징계 및 주의·경고·훈계 등 처분 현황을 점수화해 감점 처리한다. 처분 자료 반영 기간(2014년 7월~2015년 6월) 대상 사건을 우선 포함하되, 평가 기간 내 언론 보도·감사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부패 사건은 감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명부 점검, 현지 점검, 제보 등을 통해 발견한 평가 신뢰도 저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설문 기간 상시 제보 창구 운영, 제보 사항 현지 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 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평가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2015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전년도 대상 기관 및 분류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일부 기관에 한해 인력 규모 및 기관 특성 등을 반영해 그룹 유형을 변경하고, 취약 기관에 대해서는 신규 기관으로 선정해 부패 사각지대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

2015년도 청렴도 측정 & 부패방지 시행 평가 추진 일정

오는 6월 청렴도 측정 실시 계획 확정·통보를 거쳐 7월·11월 신뢰도 저해 행위 집중 점검 및 청렴도 측정을 시행한다. 측정 결과는 12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단, 지방의회와 공공의료, 국공립대학은 7월 중 별도 실시 계획을 통해 일정을 고지할 예정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상시 진행한다. 연중 추진한 반부패 청렴 시책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한 뒤 11월 기관 별 실적 보고서 접수 및 평가를 시행한다. 정성평가를 위해 7월 중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구성되며, 내년 1월 평가결과 발표와 함께 우수 기관/공로자를 선정한다.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공로자에게는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종합평가 상위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로자는 개인 포상한다. 또 우수 기관 담당자에게는 청렴 선진국 반부패 해외 교육 훈련 및 반부패 기구 시찰 기회를 제공한다.

평가 부진 기관에는 컨설팅을 제공, 실질적 개선 지표가 나타날 때까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지속 시행하며 관리를 강화한다.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평가 시 평가 비중 확대 방안이 병행되며, 구성원 의식 변화를 유도할 반부패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멀리 있지 않다. 불합리한 규제 없이 청렴하고 깨끗한 선진 사회가 바로 전 세계 기업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다. 권익위는 매년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주한 외국 기업 CEO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가 바로 그것이다.

제8차 주한 외국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

기업하기 좋은 청렴한 선진 사회 구축을 위해



외국 기업 CEO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권익위의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며 느끼는 어려운 점, 불합리한 점들을 기탄없이 얘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권익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란 이정보 위원장의 인사말에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 기업 CEO들이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지난 2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 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는 벌써 8회째를 맞이하며, 권익위가 외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50여 명의 외국 기업 CEO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권익위의 성과와 2015년 업무 계획을 설명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과 반부패 3법의 조속한 제·개정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옴부즈만 기능도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권익위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했다.

권익위 관련 외국 기업인의 활발한 질의 이어서

특히 참석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기에, 이정보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이정보 위원장은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우리 사회의 연고·온정주의에 따른 청탁 근절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종전에 규제하지 않았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참가자는 “외국인 투자 기업 종사자로서 부정청탁 금지 대상과 행동강령 범위 확대에 대해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며 권익위의 반부패 노력을 응원했다. 또 “퇴직 공직자의 공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보 위원장은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가진 퇴직 공직자가 연관 기업에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하고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됐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참가자는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 기업인들이 경로 우대를 받지 못하는 것,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 한국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를 민원으로 접수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외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권익위는 과거 7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국·공립 보건의료 전문가의 강의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제안에 대한 조치도 취해졌다.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신분인 공무원과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회의 등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었다. 의사가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관 316개 중 2013년 외부 강의 등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기관이 76%를 차지했던 것.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공공의료 기관 행동강령에 외부 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보완·구체화해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를 직무 관련자로 명시하고, 외부 강의 등 신고 규정에 제약 업

“
주한 외국 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는
 벌써 8화째를 맞이하며,
 권익위가 외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체, 학술대회, 제품 설명회, 번역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자 징계 조치 의무화, 행동강령 이행 점검 및 교육 강화 등의 조치도 함께 권고했다. 다시 말해 의견 청취에만 머물지 않고, 권익위가 직접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며 제도 개선 권고와 후속 조치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권익위의 활동은 중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청렴한 선진 사회를 만들려는 권익위의 활동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권익위의 노력과 더불어 주한 외국 기업 CEO 초청 정책 간담회가 우리나라 경제와 외국 기업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연도별 정책 간담회 건의사항과 후속 조치

● 2008년 제1차 간담회

주민등록번호 기재 관련 외국인 민원신청양식 개선 건의

- 개 소관 부처에 외국인 민원신청양식 개선 등 제도 개선 권고 (2009. 4. 18)
- 신원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및 병기
-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사무 확대

● 2009년 제2차 간담회

의약품 유통 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촉구

- 의료 분야 전반 부패 요인 해결 방안으로 '요양 급여 운영 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 (2009. 7.)
- '의약품 거래 및 약가 제도 투명화 방안' 마련 (2010. 2.)
- 의료법 & 약사법 & 의료기기법 3개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 시행 (2010. 11.)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투이웃제' 시행 (2014. 7.)

● 2010년 제3차 간담회

정부 계약 업무 체결 시,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건의

- 공공 부문 계약 과정에서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공공 계약에 해지 · 해지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선안 마련 (2013. 6.)
- 공공 계약 입찰 · 계약 과정에서의 부패가 적발될 경우, 해당 공공 계약은 해지
- 민원방문 사전 예약제 도입 (2012.10.)

● 2011년 제4차 간담회

조달 · 계약 관련 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수준의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필요 건의

- 조달청,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규정을 행동강령에 반영 (2012. 9.)
- ※ 직무 관련자와의 저녁식사는 원칙적으로 제한, 식사 시 제3자를 배석

● 2012년 제5차 간담회

공기업에 대한 행동강령 적용 및 관련 교육 실시 건의

- 현재, 868개 공직 유관 단체가 내부 규정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 · 시행 (2014. 3.)
- 106개 공기업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실시
- 신규 공직 유관 단체 및 행동강령 미 제정 기관 대상 행동강령 설명회 실시 (2014)

● 2013년 제6차 간담회

외국계 기업 군수품 입찰 및 납품 참여 개선 건의

- 조달청 '외국 기업 직접 입찰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2013. 5.)
- ※ 100만 불 이상의 대형 외자 구매 입찰 공고서를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에 안내해 입찰 권유
- ※ 외국어 능통자를 외국인 직접 입찰 안내 전담자로 지정해 운영

● 2014년 제7차 간담회

국·공립 보건의료 전문가 강의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의료 기관 행동강령에 외부 강의 등의 신고규정을 보완 구체화해 관계 기관에 권고 (2014. 7.)
- ※ 리베이트 제공업체를 직무관련자로 명시, 리베이트 정의규정 마련
- ※ 외부 강의 등 신고규정에 제약업체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번역 추가 명시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깨끗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지난 2월 27일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이종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내빈과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권익위의 세종시 이전 취지를 살리고자,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가진 행사로써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달랐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정책 추진과 행정 집행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과거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신문고처럼, 오늘날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정당한 권익 보호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억울함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적으로 2월 27일은 조선시대 태종이 억울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궐 밖 문루에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이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관련해 의미 있는 2월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포하고, 국민권익 보호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바 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청렴국가 건설에 기여하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이날 기념식에는 권익위의 첫 출범 배경과 함께 국민권익의 날에 대한 홍보 영상이 준비되었다. 아울러 2014년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등 4대 핵심 기능별 주요 업무 성과와 올해 권익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됐다.

권익위의 2014년은 한 마디로 현장에 답이 있었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전국 52개 현장에서 독거노인, 한 부모 가정,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 고충 민원 600여 건을 그 자리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 총 50여 건의 집단민원 갈등을 해결했으며,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는 등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또한 2015년에도 권익위는 국민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한 해를 보낼 것을 다짐했다.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집단갈등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집단민원조정법과 우리 사회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일조한 모두를 위한 날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 증진에 힘썼거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더욱이 유공자 포상은 읍부즈만·부패방지 분야 등에서 한 해 동안 기여해온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에,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의 내일은 희망으로 밝아오고 있다.

올해는 훈장 5명, 포장 5명 등 12개 단체와 104명 개인에게 정부 포상 총 57점, 위원장 표창 59점이 시상되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조영근 인천시 지방부이사관은 오페수 악취 문제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또한 주택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석유화학 공장의 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공청회 등으로 설득해 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을 널리 인정받았다.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상임 대표는 15년간 반부패 시민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부패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석류장을 수상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신희영 검사는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 검사는 2013년 7월, KTX 부품 납품 비리 사건에서 뇌물 수수 등을 적발하고 부정 부품을 납품한 업자 9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에는 전남 나주산단, 영광산단 기업 이전 보조금 비



리 사건을 수사해, 70억 원에 이르는 입지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브로커 및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부패방지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민포장을 받은 익명의 공익 신고자는 밀양 송전탑 기초 시공 콘크리트에 자갈 등을 섞어 부실하게 공사한 시공 업체의 비리 사실을 제보한 시민이었다. 이 신고를 계기로 현장 송전탑 기초 부위를 점검한 결과, 성분 불상의 부서진 파편과 나무 조각이 확인되었다. 이후 빠르게 송전탑을 재시공하도록 조치해 국민의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청렴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

이몽룡이 과연 예조판서를 맡을 만한 책임자일까? 이날 2부 행사로 열린 기념 공연에서는 판소리 ‘청렴가’를 통해 이 같은 질문이 주어졌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몽룡이 과연 예조판서를 맡을 만한 인물인지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몽룡은 춘향이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관용차인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결격 사유가 충분하지요?”

과거의 불미스러운 행적 문제로 이몽룡은 여론 질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함께 결국 예조판서 후보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게 되었다는 말에 시상식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박장대소가 터졌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공직자의 알선, 청탁 등의 비리를,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이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벼이 치부해버릴 수 있다. 이에 판소리 ‘청렴가’는 ‘이것도 부패다’란 사실을 일깨워주고 공사를 엄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의 관행을 개선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해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단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 일선에서 솔선수범하다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 진행됐다. 이 상은 옴부즈만, 부패방지,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의 분야에서 한 해 동안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해온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 날 수상자들 가운데 특별한 사연을 가진 3인의 수상 소감을 담았다.



채영수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상임이사)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영수 상임 대표는 1999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회 발족 당시부터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 등에 참여해왔다. 2001년 창립 시에는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조직 활동의 기반을 조성했고, 이후 각종 반부패 투명사회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창립 초기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투명사회 교육에 투명사회학교 학장, 공동 대표, 상임 대표 등으로서 꾸준히 활동해온 것을 인정받아 이번에 국민훈장장석류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그는 지금까지 하던 반부패 투명사회 활동을 지속해나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정치·공정 등 투명사회의 가치관을 바로 알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열심히 도울 예정이다.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사회를 만드는 운동에 많은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3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부패방지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권익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현안 과제 해결이 우선 시급하겠지만, '청렴 교육'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 학생들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성 (경기도 광주시 지방행정사무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변호성 사무관은 30여 년 공직 생활 가운데, 10년 이상을 민원 및 조사 분야에 몸담아왔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진정) 민원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거쳐 고충민원 예방, 해소 및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다시 말해 이번 근정포장은 고충민원 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 관리하고, 고충민원 서비스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를 제고해온 노력을 인정받은 성과였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해 온 만큼, 그는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충민원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역동 광주시장님과 1천 3백여 명의 공직자가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며, 최 일선에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번 수상이 미안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오신 권익위의 성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의 선도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영근 (인천광역시 지방 부이사관)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근 인천시 환경복지국장은 '갯골수로 악취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4년에 조성된 인천시 남구 용현동 갯골유수지 상류부인 갯골수로에 오폐수가 흘러들어 수질이 악화되고,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에 따른 악취 문제로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조영근 환경복지국장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재안에 따라 인천시는 현재 용역 중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갯골유수지 주변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용역사에 지시했고, 연안교 상부 구간 공유 수면 매립 및 개발을 통한 민간 자본을 투입, 갯골수로 상류부를 복개한 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 고질 악취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큰 상을 받게 되어 권익위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년 간 이어온 고질 민원이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마침내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국민권익을 지키는 365일 수호천사가 되겠습니다!



대학 기성회비 집행 내역 등 정보,
투명하게 공개할 것!

Case

A대학 학생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해 A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A대학에 기성회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A대학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기성회비에 관한 내용이란 점에서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징수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2015. 1. 27. 결정했다.



사실관계 확실히 밝히지 않고 한
감사 처분, 위법!

Case

2013년 교육부는 A대학의 취업통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대학 겸임교수 B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졸업생 등 총 24명이 부당하게 취업자로 포함돼 2012년 취업률이 부풀려졌음이 적발됐다. 이러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A대학은 6억 원에 이르는 국고 보조금을 반납할 뿐 아니라, 2013년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지적받은 24명 중 12명은 취업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나,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불명한 입증 자료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가 사실 관계를 오인한 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 졸업생들을 확인한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직장 가입자로 타당하다고 회신한 점, '취업 여부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신한 점 등에 비춰 교육부의 감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2015. 1. 27. 재결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자 늘 노력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사례를 통해 국민권익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자체 대상, 사용 현황을 고려 안한
변상금 부과는 잘못

Case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토지를 관리하며, 1974년경 화도읍사무소와 마을회관을 건축했다. 2010년부터는 그 자리에 사회복지 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 시설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시설을 운영해왔다. 2012년 9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석우리 일대에 대한 토지 관리권을 이관 받으면서, 남양주시가 무단으로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해 사용하고 있다며, '5천 3백만 원 가량의 변상금 부과'를 예고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국유지에 사회복지 시설 등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유지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상금 부과는 잘못되었다는 취지다. 종전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해당 국유지에 이미 사회복지 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2015. 2. 24. 재결했다.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Case

목뼈 이상으로 4개월째 입원 중인 환자가 있었다. 보험사(공제보험)에서는 장기입원 환자라고 위임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받아간 위임장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들 수 없었다. 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사와 공제 사업자가 고객 보험금 지급 사고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짐작될 때, 보험 소비자에게 여러 장의 '위임장'을 받아 지급 사유 조사를 실시함을 알아냈다. 그러나 위임장의 사용 목적과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는 보험 소비자에게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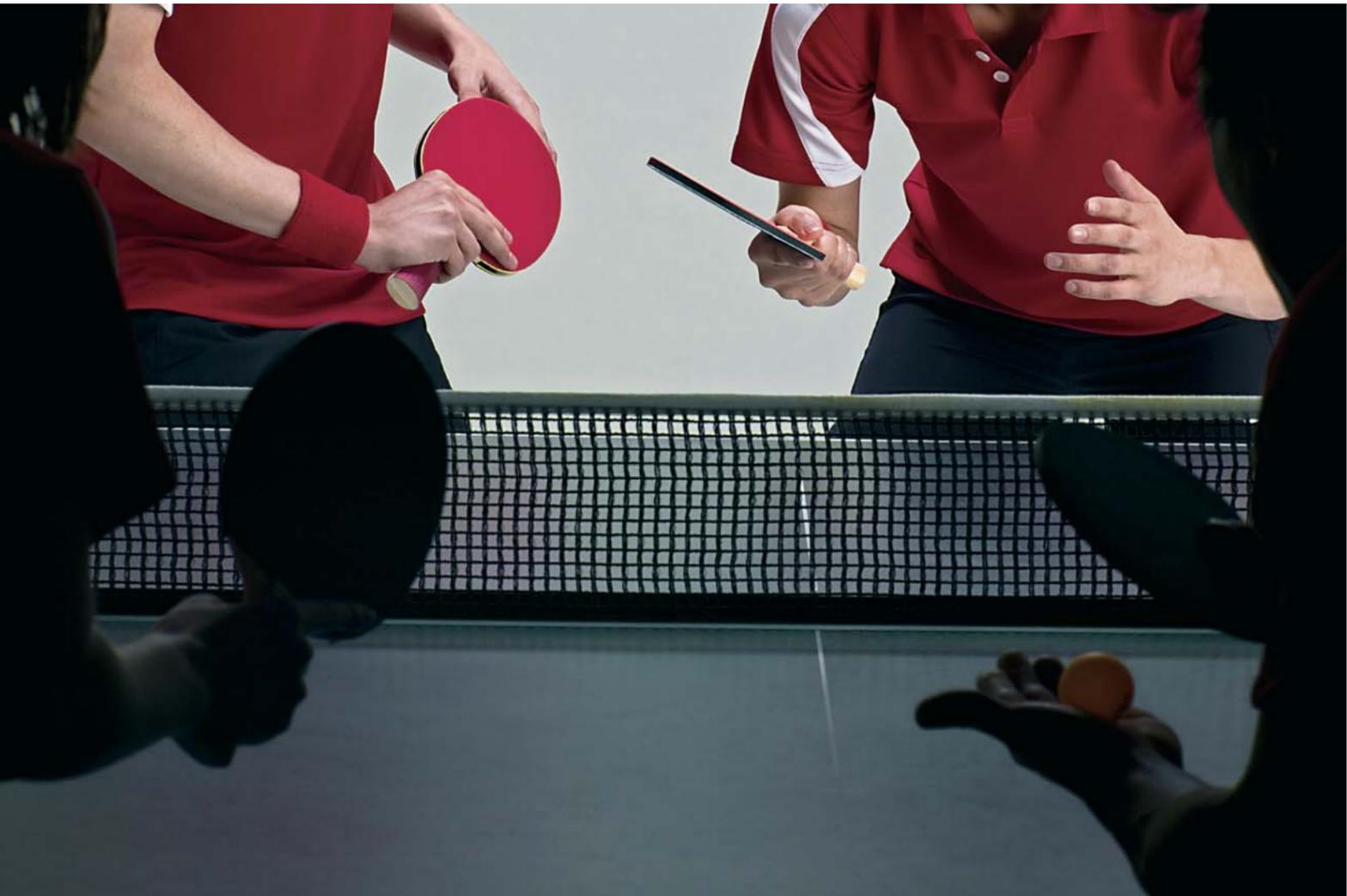
Solution

권익위는 보험사와 공제 사업자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 소비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조사시, 사용 목적과 사용 내용, 사용 결과를 해당 보험 소비자에게 안내·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2015. 3. 9. 미래창조과학부, 금융감독원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 정보, 가족 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 역시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민원 떠넘기기는 이제 옛말,

민원을 접수했는데 처리는 뒷전이고 기관끼리 떠넘기기 바쁜 상황이라면,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결과다.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귀찮은 혹은 달지 않으려는 이유로 빈번히 행해지던 핑퐁민원. 이러한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권익위가 나서, 오는 5월부터 핑퐁민원 조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핑퐁민원 조정 제도로 빠르게 해결!



민원 떠넘기는 잘못된 관행 근절 필요

국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일명 핑퐁민원. 201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약 98%가 이송 2회 이내에 정확히 접수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민원 떠넘기기가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 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된 민원 169만 건 가운데,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3만 6천여 건. 이로 인해 민원 신청부터 접수까지 평균 4.7일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14회 이송, 최장 231일 동안 접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민원 떠넘기기의 폐해는 극심했다. 이는 민원 내용이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거나, 민원 처리가 까다로우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려는 민원 처리 관행 때문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음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3월 1일부터 핑퐁민원 조정 제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핑퐁민원 조정 제도란, 민원이 각 기관으로 세 번 이송되면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처리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원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 후, 5월 1일부터 전면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핑퐁민원 조정 제도가 실행되면 3회 이송 때부터 국민신문고 분류 담당이 민원을 회수, 내용을 검토한 후 처리 기관을 지정해 단계별로 조정과 합의를 거치게 된다. 조정은 총 3차로 진행된다. 가장 먼저 직권 조정이 완료되면 2·3차 합의 조정이 진행되는데, 해당 기관이 권익위 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실무자 및 부서장 조정 회의의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핑퐁민원 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에 평균 4.7일이던 접수 기간이 2.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로써 민원접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불편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 편의 높여주는 핑퐁민원 조정 제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 위한 다각적 노력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정 실효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권익위는 조정 내용 이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정 후 분류한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민원 처리를 이행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또한 조정 내용 수용도를 높이고자 조정 내용 수용 정도와 핑퐁민원 감축 노력도 등을 정밀 모니터링 해 각급 행정 기관의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핑퐁민원 조정 제도 시험 운영에 앞서 기관별 의견을 취합해, '민원 분류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의견 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행정 기관, 교육청, 공공 기관 등 800여 기관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추후에는 분기별로 공공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 처리 분류 기준표를 정비하고, 조정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 해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해나가는 등 제도 안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핑퐁민원 조정 과정에서 민원을 통한 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 간 조정·합의 기능을 활용해 제도 개선 과제 발굴을 병행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몇 해 전부터 전화 통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어더니, 이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생겨난 신종 범죄. 편리한 삶을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방심하는 사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니…….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평소 철저한 대처가 필수일 터.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알아두길 바란다.

관공서 사칭 스미싱 금융 사기,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대처하자!

개인정보 술술 새나가는 스미싱 피해 급증

하루에도 몇 통씩 주고받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그저 편리한 소통 수단쯤으로 여긴다면, 이제 생각을 바꿀 때다. 바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스미싱 피해 때문이다. 스미싱(Smishing)이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와 낚시(Fishing)란 단어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해킹 기법을 일컫는다.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소액 결제 인증번호를 범인에게 전송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정보가 새나가고, 소액 결제까지 이뤄진다는 점이다.

게다가 요즘은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정도를 넘어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공인인증서 등 모든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더 큰 금융 범죄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다양하고 교묘해진 신종 수법으로 피해 확산

2014년 스미싱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와 관련한 권익 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건수 현황을 보면 1분기 1,478건, 2분기 1,815건, 3분기 2,013건, 4분기 2,302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 해 동안 110 콜센터로 접수된 스미싱 관련 총 상담 건수는 1,099건. 이 중 하반기의 상담 건수가 902건으로 상반기의 197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방법도 다양각색이다. 개인 신용정보 확인이나 이벤트 확인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 방법들이 갈수록 교묘해져 의심하지 않고 클릭했다가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스미싱 유형별 피해 상담 비중을 보면, 과태료 등 각종 생활 불편 신고가 48%,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이처럼 관공서를 사칭한 사례의 비중이 높

TIP1



치밀하고도 다양한 스미싱 상담 사례



▶택배사 사칭

- **주소지가 불명**이라며, 확인 절차를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요구

▶검찰청 사칭

- **공무 집행 방해죄 당사자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요구

▶법원 사칭

- **법원에서 재산 압류를 통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요구
- **소송 등기료를 입금**하라는 내용과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요구

▶은행 사칭

-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사용하는 계좌 개설 시 기재한 주소를 수정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 **농협에서 대출이 승인**되었다며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요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칭

- **행정심판 재산처분통지서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요구

▶관할구청등 관공서 사칭

- **주거환경 개선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니 내용을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
- **전봇대 고장신고 접수**건 **포상금 지급 내역 확인**을 위해 첨부된 인터넷 주소 클릭 요구

▶민원24 사칭

- **민원24에서 증간소음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 발송

은 것은 국민들이 관공서를 신뢰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외에 교통법규 위반 벌과금, 범칙금 등이 12%, 청첩장과 택배 및 등기 반송이 각각 10%와 5%를 차지하는데, 최근 들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를 사칭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예방이 최선,
피해 후에는 빠른 처리가 우선**



스미싱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방법이 워낙 다양한데다, 매번 달라지는 발신번호를 윈천 봉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철저히 조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뜻이다.

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로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 지인에게 온 문자 메시지라 해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 전에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만약의 경우는 생길 수 있는 법. 혹시라도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해당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해 상담을 요청하면 통신사의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 은행의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 요청' 등 피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관련 절차를 밟으면 피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 개인 신용정보 확인이나 이벤트 확인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 방법들이 갈수록 교묘해져 의심하지 않고 클릭했다가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

TIP2

스미싱 피해 예방은 이렇게!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클릭하지 않기
- 미확인 어플리케이션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하기
 - ※ 방법: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 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 혹은 결제 금액 제한하기
- 스마트폰용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
- T스토어 · 올레마켓 · LGU+앱스토어 등 공인된 오픈 마켓을 통해서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 보안 강화나 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입력하지 않기

◎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하는 똑똑한 방법

▶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구제'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경찰서를 방문해 발급 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가입사, 결제 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악성 파일을 삭제한다.
 - ※ 방법: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 여부 확인 → 해당 'apk 파일' 삭제
 - ※ 삭제가 되지 않는다면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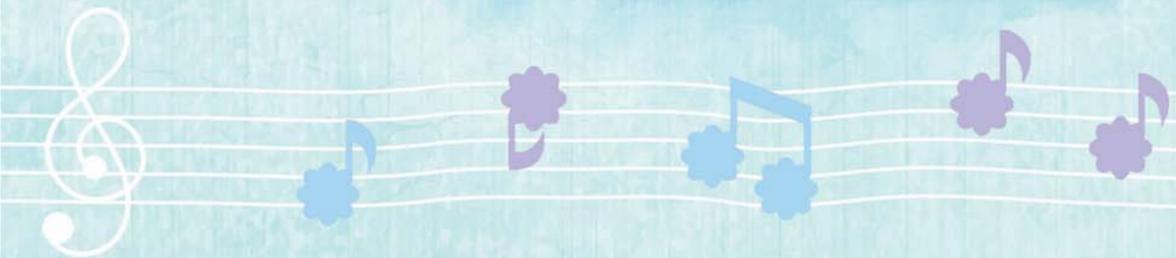
▶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파일을 삭제한다.
- 해당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예방 서비스를 이용한다.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새로운 시작, 봄맞이 디톡스하세요
- 42 **문화 레시피** 문화가 생동하는 봄, 봄, 봄...
- 44 **똑똑! 생활법률** 교통사고 합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 처리 과정이 궁금해요!
- 46 **꼭 알아주세요!**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가족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 48 **ACRC News**
- 50 **독자 옴부즈만**



글:
윤진아 기자

사진:
정준택(fun studio)



있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부패와 비리의 홍수 속에 국민의 한숨과 분노는 날로 늘고 있다. 그렇다고 꾸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들 빨리 가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른길로 가는 것일 터. 이것이 송준호 상임 대표를 필두로 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실망하지 않고 희망의 씨앗을 찾아나서 온 이유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 대표 송준호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절대부패’ 오명 벗은 한국, 이젠 투명 4강으로!

반부패 청렴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NGO로서 다각도로 문제를 제기하며, 부패인식지수와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 대표 송준호). 송준호 대표 이하 본부 일동 모두는 지난 3년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제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 달려왔다.

“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란 시도 있잖아요.(웃음) 법 제정에 걸림돌이 나타날 때마다 참으로 집요하게 제정촉구 운동을 전개했어요. 부정청탁이 온정으로 미화되고, 뇌물이 선물로 포장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식의 짜고 치는 끈의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되니까요.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 관행은 그래도 많이 개선됐어요. 국제투명성 기구가 매년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CPI)도 1999년의 3.8점(10점 만점)에서 꾸준히 상승해 2005년에 5.0점을 기록하며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2008년에는 5.6점까지 상승했습니다.”

일상의 부패 관행이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사회 고위층

과 공직 사회 내면에서의 부패는 더욱 고질화, 고착화되면서 국민들을 힘 빠지게 했다.

“특히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우리 사회의 파수꾼이어야 할 사람들이었기에 충격이 컸죠. 그런데 하나같이 법의 심판은 부패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줬어요. 이유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2월 권익위로부터 부정청탁 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달란 요청이 왔을 때, 직감적으로 이 법이 ‘부패 척결의 확실한 처방전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명사회운동본부와 부정청탁금지법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4개월 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시민 단체의 관심과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를 함께 동참시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이 초안에서 후퇴하려고 할





때나 좌초할 것 같은 고비마다 성명과 논평, 인터뷰, 기자 회견을 통해 여론을 환기했고, 모든 국회의원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간곡한 편지를 발송하기도 했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다. 물론 법이 만능은 아니다. 법의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우선 시민 모두가 법을 제대로 지켜

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무서워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교통질서를 지킴으로써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애초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입법했지만, 지금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어요. 앞으로 시민 단체, 종교 기관을 포함해서 사회에서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에까지 적용 대상을 넓혀야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투명사회를 염원하는 온 국민들에게 법의 탄생을 알려야 하고요.”

투명사회 '이상촌', 꿈은 이루어진다!

홍사단 부설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01년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정직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란 목적으로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 대표로 선출된 송준호 홍사단 부이사장은 안양대 경영학과 교수로 교수협의회 회장과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온전히 박혀 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사람이지!’란 한 문장에 사람이 다섯 번이나 들어간 게 인상적이었어요. 결론은 다른 사람에게 떳떳하게, 청렴하게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때 교장선생님의 한 마디가 제 삶의 이정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송준호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 대표가 청소년 투명 교육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을 고민하고 바지런히 실천에 옮기는 송준호 대표는 “학생 시절부터 커닝하지 않기, 교통신호 지키기 등을 실천했더니 되려 ‘바보’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송 대표는 크고 작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법과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자 애쓰며 산다. 가로질러 가면 금세 집에 닿지만, 동네 아이들이 노는 흙을 밟지 않으려고 놀이터 주변을 크게 돌아 귀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집에서 무심코 하는 부모의 거짓말이 알게 모르게 자녀의 언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귀찮은 전화에 ‘나 없다고 그래!’라고 시킨다거나, 입장료 몇 푼 아끼겠다고 자식에게 ‘누가 물어보면 0살이라고 해!’라고 시키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던 도산 선생이 건설하고자 한 이상촌(理想村)을 곧 투명한 사회라고 믿는다는 송준호 대표는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2016년 9월이면 우리나라도 부패에 관한 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패인식지수가 1점만 올라가도 1인당 국민소득이 4,700달러 향상된다는 연구 결



과도 청신호를 보낸다.

원인과 달리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져 해석하지만, 완벽한 부패 근절법을 위해 송준호 대표와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앞장서서 보완 활동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열심히 사는 당신, 제대로 가고 있나요?”란 질문도 사회 전반에 끊임없이 던질 계획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 일각에서도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느니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부패 척결을 위해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부패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내 일이니까요. 먼저 나 자신부터 부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부정과 비리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눈감아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나가다 보면, 투명사회 세계 4강의 꿈은, 꼭 이뤄질 겁니다.”

“

2012년 2월 권익위로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달란 요청이 왔을 때, 직감적으로 이 법이 ‘부패 척결의 확실한 처방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글:
윤진아 기자

새로운 시작, 봄맞이 디톡스 하세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돼 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부터 살피는 세상에 살고 있고, 화학 성분으로 이뤄진 화장품을 바르며, 웬만한 거리는 자동차로 이동한다. 주변 화단이나 공원에는 제초제가 뿌려지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전자파를 흡수하고 있다. 그뿐인가.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해 내분비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에도 알게 모르게 노출돼 몸속 면역체계가 깨지고 있다. 나이만큼 몸속에 처곡차곡 쌓이는 독소의 역습을 받고 싶지 않다면, 더 늦기 전에 디톡스(detox, 유독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 할 때다.



생활 속 독소 배출? 어렵지 않아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 대부분은 우리가 숨 쉬는 생활 환경 속에 방출되고 있다. 노후된 수도관을 통해 흘러나온 수도물은 납을 함유할 수 있고, 코팅이 벗겨져 늘어붙는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거나, 표백 방부 처리된 일회용 젓가락으로 국물 요리를 먹거나,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것은 독을 들이켜는 행위나 다름없다. 다들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의 양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구이와 튀김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발 스모그가 최악이었을 때보다 높은 수치라고 한다. 때문에 조리 시에는 환기를 자주 하고, 기관지나 면역력이 약하다면 친환경 주방 용구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가스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우리 몸에 중금속이 쌓이면 피로, 두통, 면역력 저하, 탈모, 대사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중금속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신경독성 혹은 발암성으로 인해 치매, 신경염, 암과

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 물론 중금속이 들어왔다고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해 미네랄이 몸 밖으로 배출하려면 납은 10년, 카드뮴은 수십 년이 지나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몸에 좋다는 것을 더하기에 앞서, 해롭고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해 우리 몸의 자정 능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막상 알고 나면 결코 어려운 일도 아니다. 우리 몸의 중금속 배출 경로는 크게 5가지가 있다. 그 중 대변이 75%로, 독소가 내장에 쌓이지 않도록 깨끗이 비워내야 한다. 다음 20%는 소변이다. 혈액이 콩팥을 돌아 나갈 때 불필요한 노폐물이 분리되는데, 이때 유해 미네랄도 노폐물과 함께 수분에 섞여 배출되므로 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땀이다. 특히 수은은 피부를 통해 땀으로 잘 빠져나가는 만큼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 결국 대사와 순환이 활발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갖는 '건강 황금법칙'은 디톡스와도 맞닿아 있다.

생활 속 운동으로 독소 제거하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는 지용성 형태로 축적되기 때문에, 지방이 적은 사람에 비해 뚱뚱한 사람에게 축적된 중금속이 더 많을 수 있다. 즉 비만을 해결하는 것도 중금속 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서도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일명 '전지현 다리 운동법'으로 알려진 모관 운동은 훌륭한 디톡스 운동이다. 베개를 베고 바로 누워 두 팔과 다리를 수직으로 들고 가볍게 흔들어 주면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한다.

붕어가 꼬리를 흔들며 전진하듯 누워서 몸통을 S자로 움직이는 붕어 운동도 장 연동 운동을 자극해 독소와 노폐물이 잘 배출되게 돕는다. 이밖에도 출퇴근길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주말에 빨래를 널면서 할 수 있는 디톡스 체조는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분비되는 물질이 달라지고, 온몸의 세포 반응도 달라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이다.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려면 2,500lux 이상의 조도가 필요한데, 하루에 단 5분만 햇빛을 쬐도 충분하다. 썩기, 걷기, 호흡,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의 리듬운동도 훌륭한 세로토닌 운동이다. 머리가 복잡하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벌떡 일어나 잠시 공원을 거닐어보자. 한 걸음, 한 걸음 땅을 내딛는 발걸음에 집중해서 말이다.



음식으로 독소들과 멀어지기

음식도 중요한 요소다. 식품을 통해 독소를 섭취할 수도, 배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타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는데, 가장 큰 원인은 다량의 어패류 섭취에 있다. 특히 먹이사슬 상부에 해당하는 참치, 고래 등의 대형생선에는 바닷물보다 약 1만 배의 수은이 농축된다. 따라서 껍질과 내장은 반드시 제거하고, 생선회보다는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고기나 채소도 뜨거운 물에 데치면, 유독 물질이 일부 제거된다.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되는 마늘, 파, 양파, 부추, 생강, 고수 등의 식재료를 듬뿍 사용하고, 디톡스 푸드로 불리는 '들기름'을 공복에 한 스푼씩 먹는 습관도 추천할 만하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빼주고 혈압을 낮춰 면역력을 키워준다. 녹차, 매실차, 꿀차 등 차의 효능은 이제 전 국민이 다 알 정도. 차뿐만 아니라 물은 몸속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만큼 많이 마실수록 좋다. 한 가지 더.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꾸는 해독 기관 '간'은 우리 몸속의 유일한 필터라 할 수 있다. 간이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꿀 때 도움을 주는 비타민, 글루타싸이온 등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는 것도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

스타벅스의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이 멋지게 보일런지 모르지만 몸을 생각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다. 유해 환경을 피하거나 개선하고, 면역력과 대사 능력을 키우는 것이 디톡스의 첫걸음. 코팅이 벗겨진 주방용품을 미련 없이 버리고, 일회용품 대신 개인 컵과 젓가락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유난하지 않다.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던,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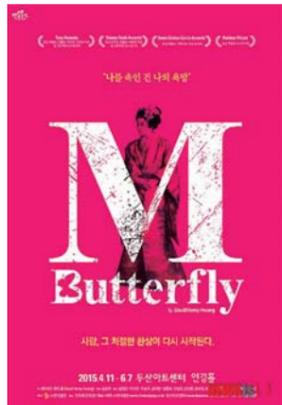
문화가 생동하는 봄, 봄, 봄...

Blooming Culture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자연이 기지개를 켜듯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눈 깜짝할 새 피고 지는 꽃잔치가 아니니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다. 생동감 넘치는 봄날의 문화가 지금 전국 도처에서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다.

Play 〈M. Butterfly〉

인간을 속이는 인간의 욕망, '이토록 매혹적인 인간 탐구라니!' 엠 버터플라이(M. Butterfly)가 4월 11일 세 번째 공연에 올랐다. 2012년 국내 초연 후, 끊임없는 재공연 요청으로 지난해 3월 앙코르 공연에서 2만 5천 명이란 놀라운 관객 수를 기록하며, 작품성과 함께 레퍼토리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1986년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법정에서 선 버나드 브루시코 프랑스 영사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이 연극은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남녀 관계의 권력, 동서양의 편견을 비판하며 선세이션을 일으켰다. 인간의 욕망과 환상으로 확장된 스토리는 인간의 본성과 심리를 정확히 집어내는 수작으로 평가받으며 토니 어워즈 최고 작품상, 드라마데스크 어워즈 최고 작품상, 풀리처상 노미네이트 등 진기록을 양산했다.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무대, 시공간을 넘나드는 오페라와 경극 등 다양한 볼거리가 관객 모두에게 강한 울림으로 각인될 듯하다.



Information

기간 : 2015년 4월 11일 ~ 6월 7일
장소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Exhibition 〈국립현대미술관 정원전〉



미술관, '컬처 테라피'

이미지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긴장을 내려놓고 쉬도록 돕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울창한 초록 빛 숲이 관객을 마중 나오며 자연의 기를 전한다. 도심 속 열린 문화 공간을 지향하며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국민의 이상적 정원'이 되자는 사명감을 다지며 기획한 전시다. 정원전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공동의 주제와 영역별 특징을 감상하도록 했다. '만남'의 영역에서는 관람객이 삶의 여정에서 겪는 다채로운 경험을 반영하는 작품들을 만나게 된다. 현란한 색채와 감정들의 폭주가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침'의 영역은 장엄한 폭포 아래 펼쳐지는 울창한 흑백의 숲을 통해 폐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은 환기의 경험을 제공한다.

Information

기간 : 2014년 10월 21일 ~ 2015년 4월 26일 (월요일 휴관)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usical 〈파리넬리〉



천상의 목소리, 완벽하게 깨어나다

뮤지컬 '파리넬리'가 최근 1차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체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상반기 뮤지컬 최고의 기대작임을 입증시켰다. 유럽 최고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자 성악가)가 등장하는 만큼 웅장한 오페라 형식을 차용해,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헨델이 작곡한 '울게 하소서(ascia ch' io pianga)'가 극장에 울려 퍼지는 장면은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힐 듯하다. 뮤지컬 '파리넬리'의 특징은 기계와의 합성 없이 오직 배우들만의 목소리로 파리넬리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낸다. 파리넬리 역의 고유진과 루이스 초이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음과 화려한 테크닉으로 기대감을 모은다. 이 밖에도 21명의 배우와 20명의 합창단, 16인조 오케스트라가 이루는 웅장한 무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율을 선사할 것이다.

Information

기간 : 2015년 4월 18일 ~ 2015년 5월 10일
장소 : 유니버설아트센터

Book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

빅데이터의 우아한 곡선, 인문학을 가로지르다

2007년 하버드의 두 젊은 과학자가 '디지털 바벨'의 도서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저자들은 클릭 한 번으로 800만 권의 책을 검색하는 '구글 엔그램 뷰어'란 도구를 개발하고, 인문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의 혁명적 전환을 제안한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 이윽고 데이터가 그리는 아름다운 곡선이 전 세계 인문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비야흐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현대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디지털 기록으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잠자고 있던 옛 문헌들, 심지어 유물과 유적들도 속속들이 디지털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은 곧 데이터를 읽는 눈'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Information

저자 : 에레즈 에이든, 장바디스트 미셸
출판 : 세계집 출판사

교통사고 합의, 주차장 내 음주운전 처리 과정이 궁금해요!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회사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가해자의 대인배상 거부에 대한 문의>

여행지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사고 다음날 주거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으로 통원 치료 중인데, 가해자는 경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보험회사에 대인배상 사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합의 요청에 대한 가해자의 연락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 별도로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피해 및 인적 피해,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경우에는 경찰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경찰이 위와 같은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거나 약식으로 벌금이 내려지게 되면, 그때서야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하려 오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기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똑똑! 생활법률>에서는 본의 아니게 겪게 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법률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가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 문제',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 및 처벌 기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으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정보와 함께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음주 후 주차장에서 시동을 건 것뿐인데,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벌금이 나올 예정이러는데,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의>

음주 후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건 것뿐인데, 경찰이 나타나 음주운전을 했다며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음주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군 일은 없었고, 측정 결과 높은 수치가 나와 벌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어떻게 될 지 매우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만, 차량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 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단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이에 차량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전에 물로 헹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만약 물을 떠주면서 헹구라고 한 다음 헹구고 나서 마신 경우라면 이에 대한 위법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헹구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음주 측정 결과의 정확도에 대해서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의 약식 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위와 같은 점에 대해 다투어 보고 싶다면 약식 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식 재판에서 벌금이 과다하다고 양형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약속과 실천, 가족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국가가 뒷받침하는 한부모 자녀 양육비 청구

2년 전 이혼해 일곱 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김 모 씨는 매월 15일 전남편으로부터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지만, 지난 2년간 받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 천만 원 이상이 미지급된 상태. 경제력이 부족한 김 씨와 아이의 고통은 커져만 간다.

2012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고 응답한 한부모 가정’이 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25일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이혼 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다. 한 명의 부 또는 모가 양육과 생업을 병행하면서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양육비 지급은 차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물론 양육비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살 수도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맡기려면 상당한 수입 비용이 들어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양육비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에 큰 힘이 될 듯하다.

직원 57명 중 21명이 변호사

일·가정 양립이란 사회의 대의를 위해 법조인들도 머리를 맞댔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출범일이었던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녀 양육의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면, 한동안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양육비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것은 부모는 모의 고통일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을 통한 이혼율이 점점 높아져 가는 요즘, 양육비 이행을 보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작됐다.

지난 3월 25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가정법률사무소가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등의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 기관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녀인지 청구 소송,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신청 등의 법률 지원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법률상담 등을 함께 협력하게 된다. 이선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 취임했고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 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직원 57명 중 21명이 변호사이니, 웬만한 대형 로펌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이행관리원 내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 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반가운 뉴스다.

빈곤층 선 지원, 후 구상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 번 신청으로 원스톱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전담 기구다. 우선 아이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이혼·미혼의 한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내도록 합의 과정을 돕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재산소득 조사가 들

Information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방법

전화 : 644-6621, 온라인 : www.childsupport.or.kr,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지방조달청 내) 4, 6층 *사전 예약 필수

기타 상담 관련 전화번호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센터 : 1644-6621, 방문상담 예약 : 02-3479-5529, 양육비 이행개선팀 : 02-3479-5519, 협의 성립 지원팀 : 02-3479-5549, 이행지원1팀 : 02-3479-5629, 이행지원2팀 : 02-3479-5649



어가고,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채권추심 등을 통해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후 감시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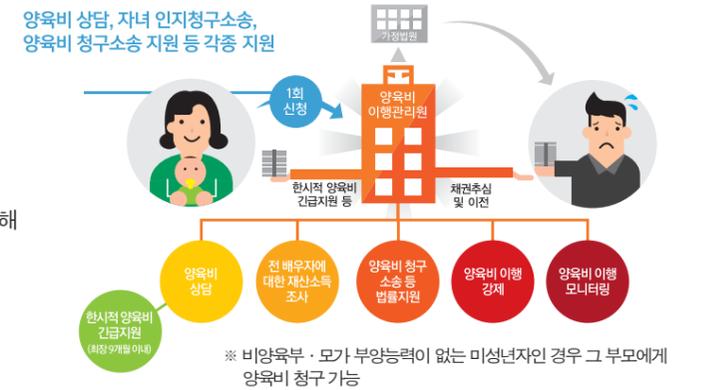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 상담과 당사자 간 협의 중재,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청구·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의 70~150% 이하 등 저소득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또한 청구할 예정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신청자가 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공 서비스를 위임할 수도 있다. 또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양육비 이제 손쉽게 받으세요!

◎ 양육비 이행 지원 절차는?

- ▶ 1회 신청으로 상담, 협의 지원 및 채권추심 등을 일괄하여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양육부·모/비 양육부·모가 갈등 없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 양육비 불이행 시 이행 확보 조치를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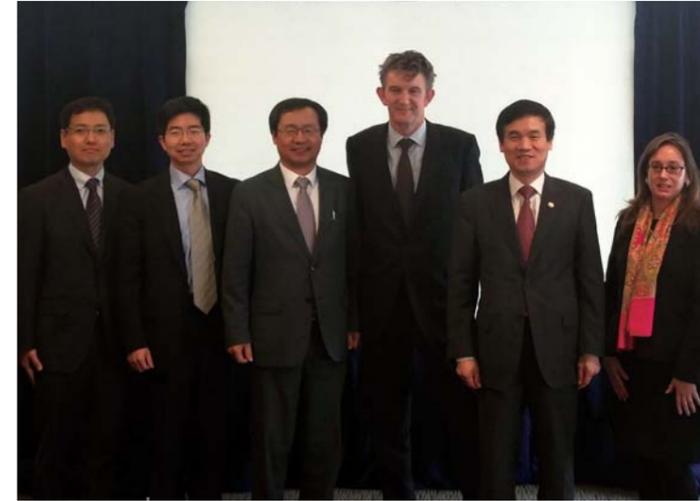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실시



지난 3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권익위와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의 주최 아래, 행정심판기관 통합과 이의신청제도 정비 등을 중심으로 홍성칠 권익위 부위원장, 신학용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장, 김기식 의원을 비롯해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행정심판기관의 통합과 각종 이의신청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감했다. 또한 토론회 이후에는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장 신학용 의원이 모든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행정심판원법(가칭)'을 발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권익위에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권익위는 TF 구성 및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 개최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3월 2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현지 우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한국과 영국 정부의 부패 척결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가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현지 한국 기업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는 권익위 관계자와 영국 법무부 및 영국표준협회(BSI)의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한국의 부정청탁 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BS 10500)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미 상공회의소 회원 대상, 반부패 정책 설명회 개최



권익위는 지난 3월 13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미국상공회의소 윤리위원회(Compliance & Ethics Committee) 회의에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 및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소개하는 '반부패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외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알리고, 권익위의 부패 해결에 대한 그간의 노력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평가된 부패 인식도(CPI)가 향상될 수 있도록 외국 기업인들의 인식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국제 심포지엄 개최



권익위는 지난 4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으로 반부패·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외국의 반부패 입법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반부패 정책 추진 전략 수립 과정에서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신임 주한 영국대사 접견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지난 3월 12일 서울중합민원사무소 접견실에서 찰스 헤이(Charles Hay) 신임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영 반부패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부정청탁금지법 및 영국의 뇌물방지법 등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 강화 등 여러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창원 현장조정회의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회의실에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주민들과 창원시 제1부시장,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처리 시설을 조기 이전하기 위한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창원시는 기존 처리 시설이 이전되는 대로 해당 부지에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진해구 행암동 주민들은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 퀴즈

이혼 후,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으로 양육비를 포기한 양육 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여성가족부 산하 전문 기관, 양육비 지급은 차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기관이 탄생하게 되었다.

Hint
0304월호, '꼭 알아주세요!' 칼럼이 실린 46~47p 참고

독자의 작은 소리도 들겠습니다

지난 호 정답
업사이클링(Up-Cycling)

- 지난 호 당첨자**
- 장병부 (구미시 형곡동)
 - 김용성 (서울시 송파구)
 - 김대현 (경기도 평택시)
 - 최석원 (부산시 사하구)
 - 송인호 (강원도 춘천시)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의 한마디

장병부 (구미시 형곡동)	김용성 (서울시 송파구)	김대현 (경기도 평택시)	최석원 (부산시 사하구)	송인호 (강원도 춘천시)
〈국민권익〉 매거진을 KTX 기차역이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은행과 우체국 등 남녀노소 상관 없이 항상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장소에 비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어 구독률은 물론 권익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공익 캠페인을 제작해, 공중파 방송은 물론 케이블 채널 및 종편 채널을 통해 일정 기간 방송을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국민권익' 매거진 책자도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권익' 관련 에피소드 등을 웹툰 형태로 공모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웹툰을 책자로 만들어 각종 관공서 및 은행, 우체국에 배포하면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 소식지 책자를 받으면, 바로 볼 수 있게 '국민민원 통합안내 110콜센터'와 '부정공익 신고1398'에 대한 소개 및 내용을 전면 배치해 꾸준히 실으면 가장 좋은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공익 캠페인처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 매거진을 홍보하거나, DVD 등에도 홍보 영상을 삽입해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등 인기 검색엔진과 연계해 온라인 배너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 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누구나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
제2의 인생 시작!

능력 있는 커리어맘, 든든한 엄마가 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가는 노사정 대타협!

**내 아들과 딸의 취업이 열립니다.
노사정 대타협!**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사회,
우리 아들 딸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이 없는 사회,
우리 청년들이
더욱 일할 맛 나지 않을까요?